

총선 D-9 이것이 변수다

① 투표를

유권자 잡을 대형 이슈 실종

4·9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양대 정당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율'이다.

전국 245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전남·북 31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3분의 1가량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양대 정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서는 자당의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개혁적인' 민주당이, 낮으면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업계와 정치권의 통설이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도 높았고, 고(高) 연령층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분석이다. 결국,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한나라당이 유리해지고, 20~30대가 대거 가세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란 예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총선 투표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지난 2004년 총선에선 예년보다 높은 57.2%의 투표율을 기록해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대형 이슈가 없어 투표율이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고품자 지지층이 적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 통설인 만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20~30대 유권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 지지율=실제 득표율' 속단하기 힘들어 민주 20~30대·한나라 고연령층 투표 독려

한나라당은 전체 투표율이 하락할수록 그만큼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많은 고연령층의 투표 참여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만큼,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러나 투표율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도 큰 틀에서 기존의 선거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몇 가지 유의미한 변수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이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불과 4개월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대한 '갈증'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와 실제 투표율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선은 참패했지만 총선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하면서 대거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이번에도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사다.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의 출현으로 영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 수도권, 한나라 영남 공략

강재섭 "TK 퍽박" 발언 파문... 강금실 "지역주의" 반박

4·9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략지역 공략에 총력을 펼쳤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화력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나흘간 수도권에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전 9시 인천 한광원 후보를 시작으로 밤 9시 서울 박영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12명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18대 국회마저 한나라당에 넘겨주면 우리 서민과 중산층은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살겠느냐"며 "국회를 한나라당에 넘겨주면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고 견제론을 집중 부각했다.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부활 유세단'도 이날 발족했다. 장 상 전 민주당 대표와 정균환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고 김 민석 최고위원, 유종필 대변인, 김형주 이화영 의원이 수도권, 이영호 의원이 영남을 맡기로 했다.

서울 중구와 동작을에 각각 출사표를 던진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후보는 이날 타지역 유세는 업무도 내지 못한 채 지역구 공략에 치중했다.

한나라당은 29일 경북지역 유세에 이어 30일엔 경남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30일 경남 통영과 창원 등을 방문해 시장과 상가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 대표는 이날 통영시 중앙동 문화마당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큰 머슴이 일을 하려면 작은 머슴이 적어도 150명이 있어야 한다"며 "통영·고성에서도 큰 머슴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머슴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가 손조롭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날 경남 유세에 이어 31일엔 부산으로 이동해 지원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강 대표가 지난 28일 "TK는 YS(김영삼) 정권부터 따지면 지난 10년이 아니라 15년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손해를 봤다"면서 "한나라당을 뽑으면 그동안 피해 본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왕창 밀어 달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지역주의 주장'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열린 중앙선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돈 선거에 이어 이제 망국적 지역주의까지 들고 나왔다"며 "강 대표의 생각과 발언은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장으로... 역으로... 상가로... 한표 호소

4·9총선을 10일 앞둔 30일, 목포에 출마한 민주당 정영식(맨 왼쪽) 전 행정부차관, 무소속 박지원(가운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무소속 이상열 의원이 각각 시장과 목포역,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산강 통해 기아차 수출

■ '영산강 뱃길 복원 가시화' 과제와 전망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중견업체인 보성건설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복원 사업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등 사업 준비가 본격화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문화·생태 구상체 지향 =영산강 복원 사업의 큰 틀은 해당 권역을 새로운 경제·관광·생태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영산강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생태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세워졌다.

우선 광주에서 목포를 잇는 뱃길을 다시 뚫을 경우 광주의 내륙항 기능이 생겨나 대 중국·동남아 물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산강 복원의 경제적 효과는 '영산강을 통한 기아차 수출'로 집약된다.

영산강 유역의 다양한 문화 역사유적을 수로로 연결해 관광문화자원을 확충하고 해양레저시설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광주 문화수도, 나주 혁신도

시와 해남·영암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남악신도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목포·무안·신안의 서남권개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영산강 뱃길이 J프로젝트까지 연결되면 기업도시의 제한적이었던 개발계획이 훨씬 다양해지고 범위를 넓어지게 된다.

문화·역사유적 수로로 연결 관광자원 확충

문화수도-혁신도시-J프로젝트 연계 상생 기대

시공 측면에서도 상생효과가 대단하다. 영산강 복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기업도시 단지를 조성하는 토사로 대체할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업의 주된 내용=사업은 크게 뱃길을 오가는 데 필요한 주운 시설 설치와 다리 및 철도교량 같은 횡단시설 설치, 수질개선으로 나뉜다. 전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 5천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뱃길의 최상류에는 배가 접안하는 부두(1조 100억 원)가 들어서고, 폭 75m, 수심 6.1m의 수로(1천800억 원)와 수위유지를 위한 댐, 갑문(4천800억 원)도 건설된다. 또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하천 정화사업, 퇴적물 준설 등에 2조 2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과 보전 병행=자연하천을 활용하는 영산강 복원사업은 인공수로 개발로 환경훼손 논란을 겪고 있는 경우보다 오는 차원이 크게 다르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미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이 판명된 만큼 퇴적도

준설과 하천정화는 오히려 강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명분도 함께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영산강 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라는 계획이다. 복원사업이 지역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